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98-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년 입양인식조사]

공적입양체계 시행과 가정위탁사업에 관한 인식

2024. 09. 25.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공적입양체계 시행에 관한 인식

**2007년을 시작으로 국내 입양아동 수는 국외 입양아동 수를 앞질러
여전히 입양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은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어(2023년 기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로 입양된 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2001~2006년 전체 입양아동 중 국외로 입양된 아동(국외입양)의 비율은 60%에 이르고, 국내로 입양된 아동(국내입양)의 비율은 40% 내외 수준에 그친다. 국외입양 비율은 국내입양 비율 대비 최소 15.8%~최대 18.8%포인트 높았다. 6.25전쟁 이후 전쟁 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입양이 성행했는데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로 담당하고, 해외입양 절차를 간소화해 2006년까지만 해도 국외입양 아동 수가 국내입양 아동 수를 넘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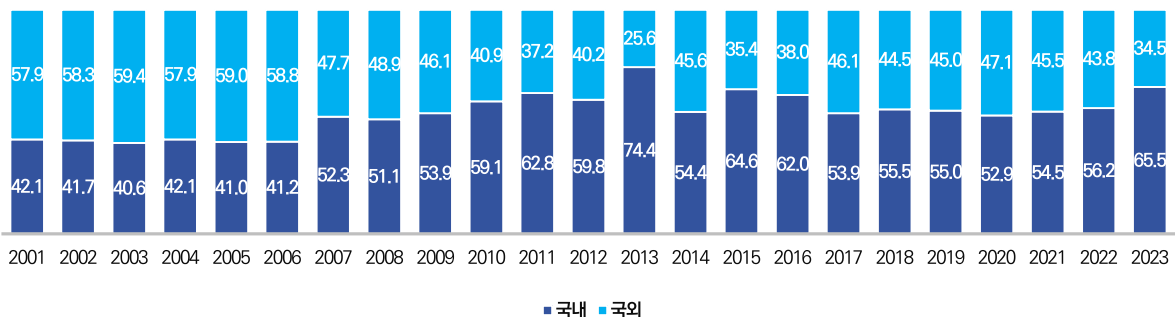
2007년, 국내입양 비율이 국외입양 비율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를 시행하고 입양부모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였다. 2007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국내입양 비율은 국외입양 비율을 앞선다. 2011년에는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해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입양특례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입양절차의 편의성보다 아동의 권리와 복리에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입양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입양이 아동복리에 최선인지 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특례법 개정 2년 후인, 2013년에는 둘 간의 격차가 48.8%포인트로 가장 크게 벌어진다(국내입양 74.4%, 국외입양 25.6%).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국내입양 65.5%, 국외입양 34.5%로 30.0%포인트 이상의 격차이다. 하지만 여전히 입양 대상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은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입양 전반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이후 국내입양 비율이 60%대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1~2006년까지, 국외 입양아동 수 > 국내 입양아동 수
2007년, 국내 입양아동 수가 국외 입양아동 수를 처음으로 추월
가장 최근인 2023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여전히 국외입양

(단위: %)

입양아동비율



비고: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 입양된 아동 연도별 현황(2024.09.04.)

출처: KOSIS 통계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활용

국내입양, 국외입양 중 무엇을 더 우선? 국내입양 우선 43% vs 국외입양 우선 44%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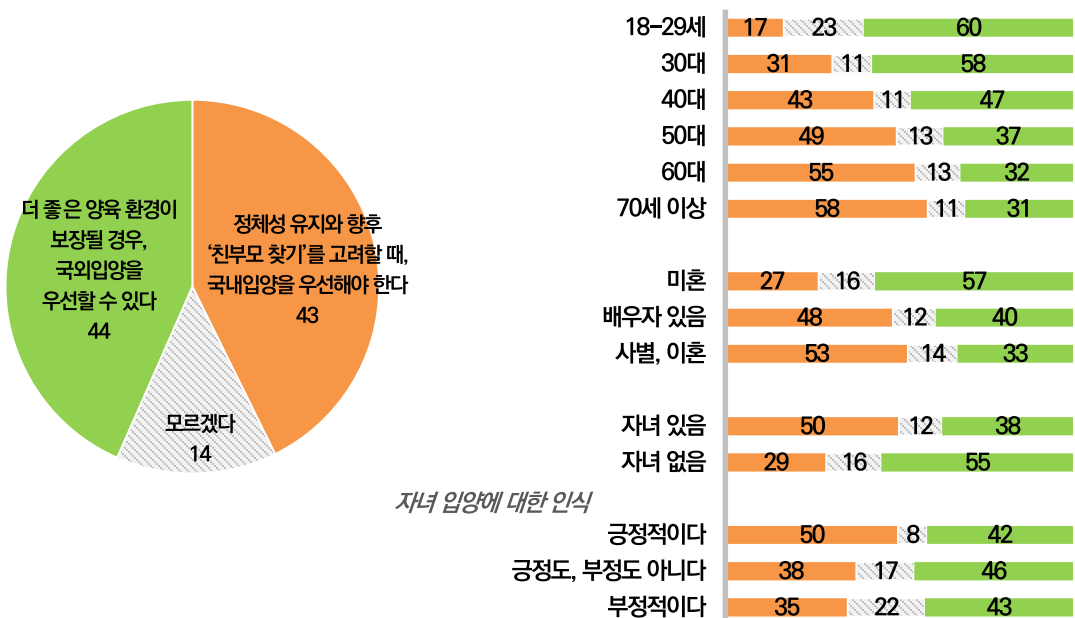
2007년을 시작으로 국내입양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사람들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작년](#)에 이어 입장은 거의 비슷하게 엇갈린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보장될 경우,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 44%,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체성 유지와 향후 ‘친부모 찾기’를 고려할 때,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 43%로 나뉜다. 정부는 2007년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를 도입하고, 최근까지도 국내입양 활성화에 추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에게 좋은 여건이 제공된다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세대, 혼인상태, 자녀 유무, 자녀 입양에 관한 인식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입장차가 있다. [2·30세대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보다는 해외입양이 더 이롭다는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인식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2·30세대의 60% 가량이 ‘더 좋은 양육환경이 보장될 경우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젊은세대는 국내입양을 우선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경향이다. 50대 이상은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50대 49%, 60대 55%, 70세 이상 58%).

미혼(57%), 자녀가 없는 사람(55%)들은 절반 이상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자녀가 있거나(50%) 기혼(48%), 사별·이혼(53%) 응답자는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자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의견이 엇갈리나, 특히 자녀입양에 긍정적인 사람은 50%가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국외입양 우선 42%).

국내입양 우선 43% vs 국외입양 우선 44% 30대 이하·미혼·자녀 없는 사람은 ‘국외입양’을, 50대 이상·기혼·사별/이혼·자녀 있는 사람은 ‘국내입양’ 우선 인식

(단위: %)



질문: 입양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쪽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민간입양체계에서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년 연속 개편에 대다수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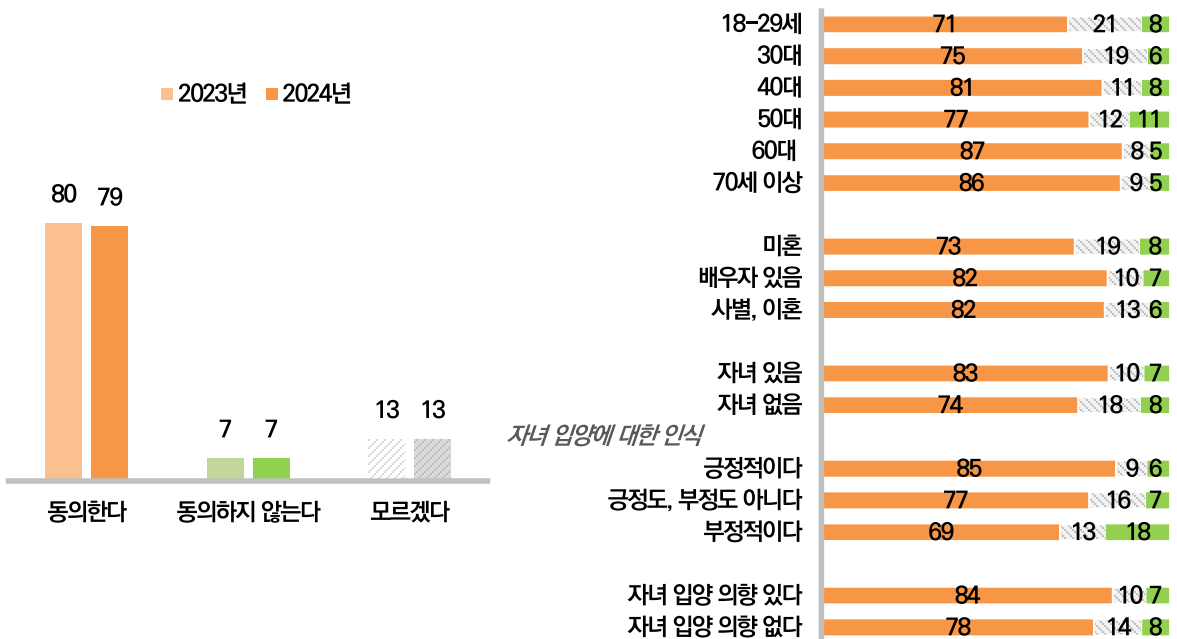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2025년 7월 19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10명 중 8명은 입양체계를 민간에서 공적입양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한다(79%).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7%,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13%로 입양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응답이 대다수이다.

세대,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공적입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40대 이상, 기혼자·사별·이혼, 무자녀인 사람이 입양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응답은 80%를 상회한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이고, 향후 자녀 입양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84% 이상이 공적입양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이어 10명 중 8명, 민간입양체계에서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

(단위: %)



질문: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체계를 민간에서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합니다. 입양체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가로 막대 그래프는 2024년 조사 결과.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7. 7. ~ 7. 10. //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공적입양체제 기대효과, 70%이상으로 높아

공적입양체제 시행으로 '원가정 보호' 76%, '국내입양 활성화'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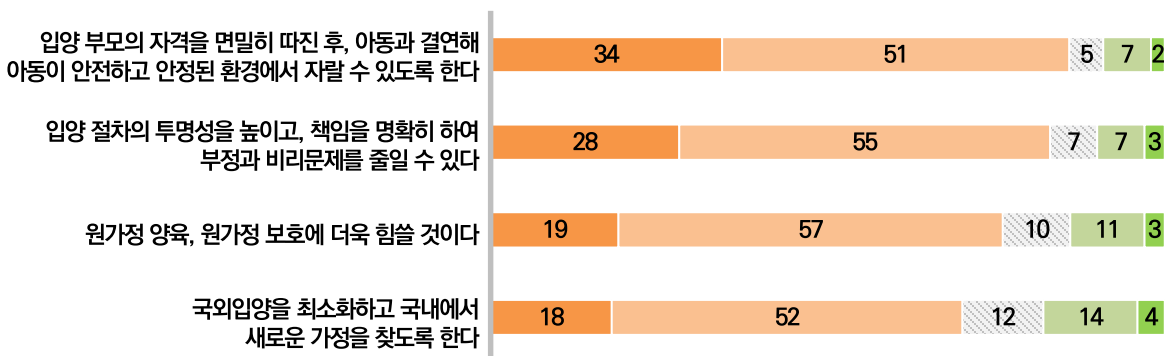
내년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적입양체제에 관해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했다. 기존과 같이 민간업체를 통해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 입양 실적 달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 문제 등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적입양체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을 주관하게 되면 '입양 부모의 자격을 면밀히 따진 후, 아동과 결연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86%)'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부정과 비리문제를 줄일 수 있다(83%)'는 인식이다. 특히 3명 중 1명은 '입양 부모의 자격을 면밀히 따진 후, 아동과 결연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매우 그렇다'고 강하게 공감한다.

모든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고, 원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이나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공적입양체제 시행으로 '원가정 양육, 원가정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76%)',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도록 한다(70%)'에 모두 70% 이상 동의한다. 공적입양체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에 70% 이상이 동의하는 가운데, 국내입양을 활성화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응답이 70%(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18% 수준이다. 사람들은 공적입양체제 개편으로 입양아동 관리, 결연, 입양 전반을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에 호의적이지만 국내입양 활성화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강도가 약한 편이다.

공적입양체제 시행으로 아동에게 안정된 생활환경 제공, 입양 절차 투명성 제고 기대해 원가정 보호, 국내입양 활성화는 70% 이상 기대

(단위: %)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모르겠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 공적입양체제 시행과 관련해,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29세 및 미혼 응답자, 공적입양체제 시행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는 글썄

공적입양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보다 개편 효과에 크게 공감한다. 개편에 동의하는 사람의 응답은 전체 응답을 상회한다. 자녀가 있거나 자녀입양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공적입양체제를 시행하면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다'는 데 7-80%가 동의한다. 반면, 18-29세(37%)와 미혼 응답자(49%) 중에서 공적입양체제 시행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절반 혹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앞서 18-29세와 미혼 응답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에서 아동에게 더 좋은 환경이 보장된다면 해외에서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이러한 인식이 이어지듯, 공적입양체제를 시행해도 국내입양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18-29세, 미혼 응답자는 공적입양체제 시행으로 인한 '국내입양 활성화'에 의문

(단위: %)

사례수 (명)	입양 부모의 자격을 면밀히 따진 후, 아동과 결연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부정과 비리문제를 줄일 수 있다		원가정 양육, 원가정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도록 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86	9	83	10	76	13	70	18
연령								
18-29세 (158)	82	6	75	12	67	13	37	32
30대 (149)	85	10	81	11	68	19	55	28
40대 (177)	83	12	81	12	75	14	74	17
50대 (196)	84	11	85	10	78	15	81	14
60대 (173)	90	7	88	7	84	9	83	11
70세 이상 (147)	89	7	89	7	86	9	84	10
혼인상태								
미혼 (291)	83	8	78	11	68	13	49	27
배우자 있음 (591)	86	10	84	10	79	14	77	16
사별, 이혼 (118)	91	6	91	7	85	10	86	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46)	87	10	86	9	80	14	79	14
자녀 없음 (354)	84	8	78	11	70	12	52	26
자녀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418)	87	8	87	8	78	13	74	16
중간이다 (496)	86	8	81	10	76	13	68	19
부정적이다 (86)	81	16	81	16	74	19	64	26
공적입양체제 개편 동의여부								
동의한다 (795)	93	6	90	7	86	9	76	17
동의하지 않는다 (74)	56	40	51	44	41	53	52	45
모르겠다 (131)	59	8	58	8	40	15	44	12

질문: 공적입양체제 시행과 관련해,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각 문항별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족과 생활 터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적입양체제를 통해 국내입양을 지향한다는 방침이고, 공적입양체제 시행과 기대효과에 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다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고 답한 세대와 응답자들은 공적입양체제 시행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에 조금은 회의적이다.

2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 관심 제고 방향

가정위탁사업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 14%

입양에 긍정적,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가정위탁사업 참여에도 호의적인 편

정부는 가정위탁사업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우선으로 하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국외보다는 국내입양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원가정 복귀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가정위탁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정위탁이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가정위탁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인 보완이 이뤄지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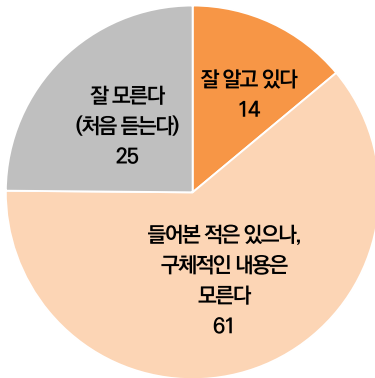
현재 가정위탁사업에 관한 인지도는 14%로 낮은 편이다. 가정위탁사업을 ‘잘 모른다(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25%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14%)의 두 배 가량 높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사람이 61%로 가장 많다.

대다수가 가정위탁사업을 잘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답한 가운데 특히 18-29세, 미혼, 무자녀, 자녀 입양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 50대,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20% 이상이 해당 사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정위탁사업 인지도는 10%대이나,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28%로 10명 중 3명 정도이다. 이는 입양 의향이 있다는 응답과 비슷하다(의향 있다 21%, 의향 없다 79%). 앞서 가정위탁사업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50대(35%)의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세대 중 가장 높다. 지난 조사에서 18-29세는 세대 중 입양 의향이 가장 높았지만, 위탁가정 참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반면 50대 중에서 입양 의향이 없는 사람은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세대 중 가장 높다. 가정위탁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아동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사업이므로, 나이가 많아 입양이 어렵다고 답한 세대의 참여 의향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사람(44%)은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3-40%에 달하고,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64%가 위탁가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위탁 참여에 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이다.

가정위탁사업에 관해 ‘잘 모른다’ 25%, ‘잘 알고 있다’ 14%에 그쳐
50대와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 가정위탁사업 알고 있다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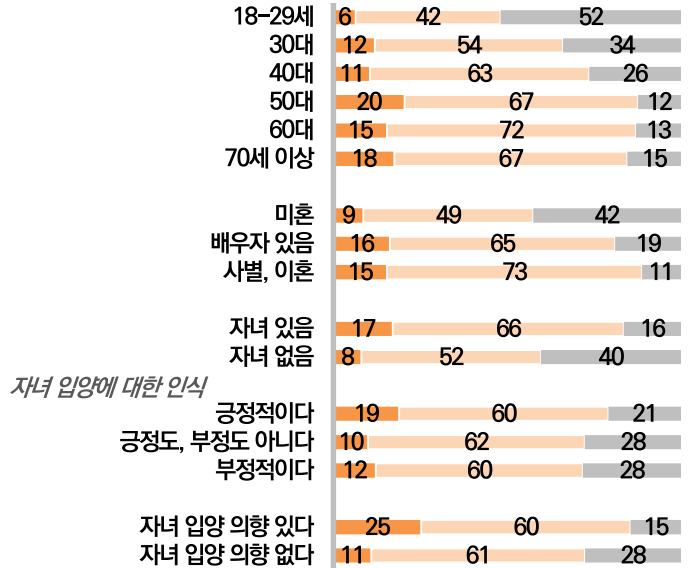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가정위탁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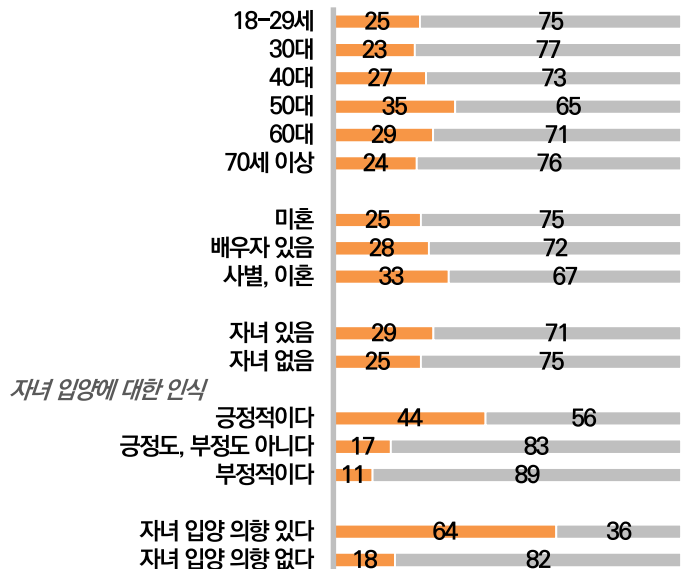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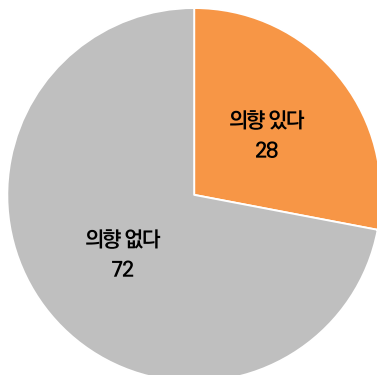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28%
50대, 입양에 긍정적, 입양 의향 있는 사람의 위탁가정 참여 의향 높은 편

(단위: %)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질문: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양육 계획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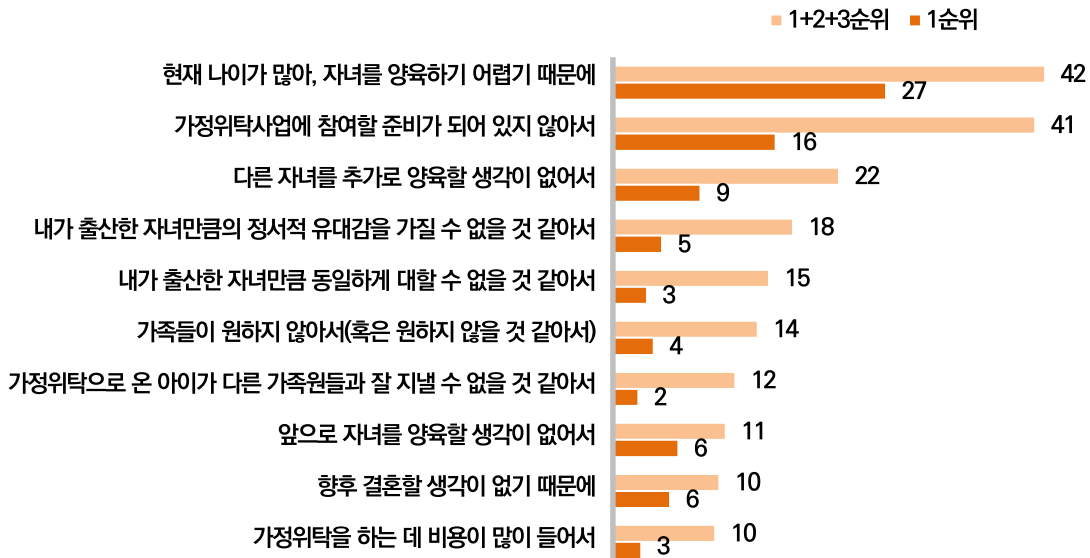
앞서 72%가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그 이유로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42%)'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다(1+2+3순위 응답 기준). 다음으로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41%)'가 뒤를 잇고,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22%)',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18%)'는 20%에 달한다.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15%)',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혹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14%)'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0%대이다.

세부 집단별로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나이가 많아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이 증가해, 60세 이상은 70%를 상회한다(60대 73%, 70세 이상 76%). 2·30대는 출산자녀와 가정위탁 아동에게 동일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18-29세는 향후 결혼 및 자녀 양육 계획이 없어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30%로 세대 중 가장 높다. 18-29세는 **결혼과 자녀 양육을 필수로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보는 세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적이거나 가정을 이루고, 아동을 보살피는 가정위탁과 같은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결혼·자녀 양육 계획이 없어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세대 중 가장 높고, 이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미혼, 무자녀 응답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에 이어 결혼 및 자녀 양육 계획이 없다는 점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꼽는다.

앞서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위탁사업 참여에 호의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자녀 입양 의향은 있지만,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가정위탁을 위한 준비 미흡(35%)과 비용 부담(28%)을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꼽는다.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42%)', '참여할 준비가 안 되어서(41%)',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 없어서(22%)' 순으로 높아(1+2+3순위)

(단위: %)



질문: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1+2+3순위 기준 상위 10개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 없는 725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양육 계획 없어서'

(단위: %)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 없음 (1+2+3순위 응답)	사례 수 (명)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서	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혹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정위탁으로 온 아이가 다른 가족원들과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정위탁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체	(725)	42	41	22	18	15	14	12	11	10	10
연령											
18-29세 (119)		3	45	1	21	18	8	14	27	21	15
30대 (114)		9	37	16	24	20	17	12	17	9	12
40대 (130)		36	41	35	16	14	19	13	12	15	10
50대 (127)		54	40	31	12	12	11	13	5	11	8
60대 (123)		73	49	24	18	20	18	9	2	4	6
70세 이상 (112)		76	34	22	14	8	12	10	3	2	9
혼인상태											
미혼 (218)		14	43	0	15	12	10	12	30	30	15
배우자 있음 (428)		51	40	31	21	17	16	13	3	-	8
사별, 이혼 (79)		67	43	30	8	12	14	4	0	12	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60)		58	41	35	19	17	17	12	-	2	7
자녀 없음 (265)		15	41	-	15	11	10	12	30	25	14
자녀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235)		48	45	18	12	12	16	10	12	13	14
중간이다 (414)		41	41	23	19	15	14	14	11	8	8
부정적이다 (76)		29	27	27	28	30	12	8	10	14	8
자녀입양 의향											
의향 있다 (75)		25	35	6	17	16	13	11	15	16	28
의향 없다 (649)		44	42	24	18	15	14	12	11	10	8

질문: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1+2+3순위 기준 상위 10개 응답만 제시함.

'다른 자녀를 추가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만,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만,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는 미혼·사별·이혼 응답자에게만 제시함.

응답자 수: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 없는 725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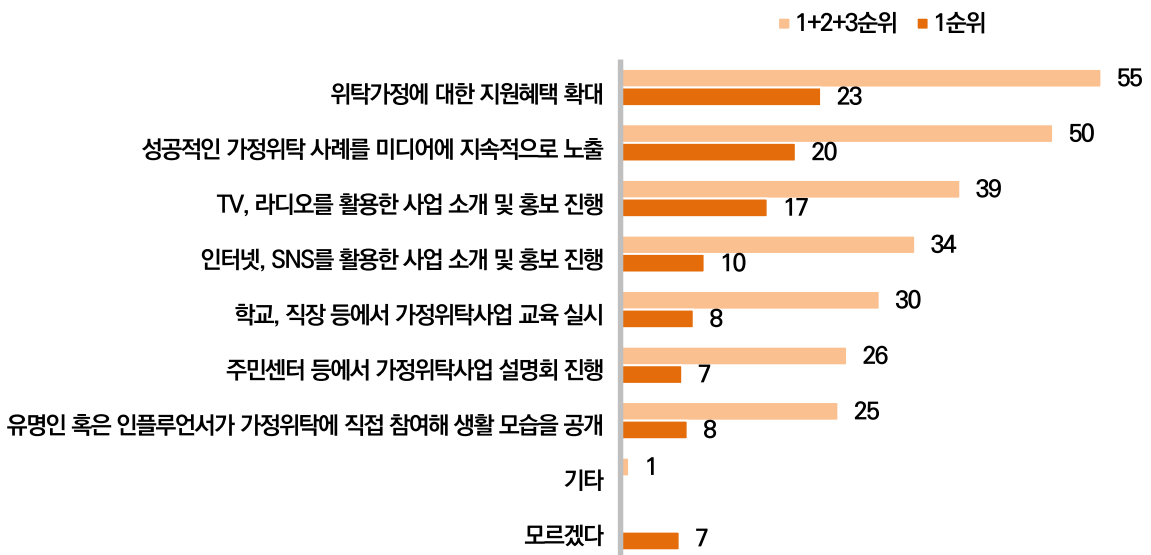
가정위탁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위탁가정 지원 혜택 확대(55%)',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 노출(50%)' 등

10명 중 1~2명 정도가 가정위탁사업에 관해 알고 있고, 참여 의향은 30%에 못 미치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55%)'를 가장 많이 꼽는다(1+2+3순위 응답 기준). 정부는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양육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50%)'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TV, 라디오(39%)'나 '인터넷, SNS(34%)'를 활용한 사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거나 '학교, 직장 등에서 가정위탁사업 교육을 실시(30%)'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도 30%를 상회한다. 4명 중 1명은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26%)'하거나 '유명인 등이 가정위탁에 참여해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25%)'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좋은 사례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가운데 세대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2·30세대 중 40% 가량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나 유명인의 가정위탁 생활을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이고, 60세 이상은 TV·라디오 혹은 주민센터의 설명회와 같은 비교적 전통적이거나 대면에서 이뤄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위탁가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 습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위탁사업 교육이나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40%에 달한다. 가정위탁사업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유명인이 위탁가정에 참여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34%로, 전체 응답 대비 높다.

가정위탁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위탁가정 지원 혜택 확대(55%)',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 노출(50%)' 등

(단위: %)



질문: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 교육이나 사업 설명회
가정위탁사업을 모르는 사람, 유명인의 위탁사업 참여 생활 노출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높은 편

(단위: %)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위탁가정에 대한 자원혜택 확대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	TV,라디오 를 활용한 사업 소개 및 홍보 진행	인터넷, SNS를 활용한 사업 소개 및 홍보 진행	학교, 직장 등에서 가정위탁 사업 교육 실시	주민센터 등에서 가정위탁 사업 설명 회 진행	유명인 혹은 인플루 언서가 가정위탁에 직접참여해 생활 모습을 공개	기타	모르겠다
전체	(1,000)	55	50	39	34	30	26	25	1	7
연령										
18-29세	(158)	54	47	31	38	31	14	37	1	11
30대	(149)	52	52	28	41	29	16	27	0	10
40대	(177)	56	49	34	35	28	26	27	3	6
50대	(196)	62	49	39	27	30	34	21	2	4
60대	(173)	55	43	48	34	31	34	20	1	7
70세 이상	(147)	50	59	54	30	30	30	20	2	3
자녀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418)	62	51	39	35	31	28	24	1	4
중간이다	(496)	52	50	40	32	29	24	26	1	9
부정적이다	(86)	43	39	34	39	25	28	27	3	11
자녀입양 의향										
의향 있다	(210)	62	45	40	34	38	30	25	3	3
의향 없다	(790)	53	51	39	34	28	25	25	1	8
가정위탁사업 인지도										
잘 알고 있다	(140)	57	47	36	30	40	34	16	4	4
들어본 적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612)	59	53	42	34	28	26	24	1	5
잘 모른다(처음 듣는다)	(249)	44	43	33	35	29	22	34	1	13
위탁가정 참여 의향										
의향 있다	(275)	63	45	44	34	37	37	23	2	0
의향 없다	(725)	52	51	37	34	27	22	26	1	9

질문: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6월 기준 전국 9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0,416명, 조사참여 1,605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9%, 참여대비 62.3%)
조사일시	• 2024년 7월 12일 ~ 7월 1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